가격폭락 양파 수매비축·산지폐기 정책 겉돈다

전남지역 수매조건 까다로워 농가 외면 계획량 26% 그쳐 산지폐기도 보상가격 턱없이 낮아 48% 불과 포기 속출

정부가 폭락한 양파가격을 회복시키겠다며 시행한 수매비축과 연이은 산지폐기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8월 말까지 시행한 양파 수 매비축 사업은 계획량 7042t의 26%인 1807t에 그

양파재배 농가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한 셈이

다. 수매가격은 1, 2등급으로 나눠 kg당 350원과 300원이다.

수매가 제대로 되지 않자 뒤늦게 산지폐기에 나 섰는데 이 또한 미봉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무안, 신안, 함평, 해남 등 7개 시·군에 배정된 2414t 가운데 지난 10일 현재 폐기에 응한 물량은 1151t으로 48%에 불과했다.

이처럼 농가들이 수매비축을 외면한 이유는 수 매 자체가 늦게 시작된데다 선별작업 등 수매조건 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7~8월 노지 야적으로 잔뜩 비를 맞거나 곰팡이병 발생으로 품위가 떨어진 양파를 모두 골라내야하는데다 수매를 위한 재포장 작업 비용이 만만치아다

여기에 수매가격과 산지가격이 비슷한 상황에서 골치 아픈 수매에 응할 농가가 있을 리 없다.

산지폐기도 보상가격이 kg당 215원에 불과하고 선별작업비를 빼면 20kg 한망(網) 기준으로 손에 쥘 수 있는 보상금이 고작 3000원 수준이어서 포기 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와 전남도 등 행정 당국의 양파대책이 겉돈 것은 기준 가격이 낮게 책정된 양파수급 매뉴얼에 만 너무 집착해 시장 반응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전남지역 양파 재배면적은 1만2080ha로 지 난해 1만124ha에 비해 19%가 늘었으며 생산량은 76만t으로 18만t(32%)이나 급증했다.

현재 전남도내 양파 재고량은 30만t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전남공무원 764명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최근 5년간 … 74% 견책 그쳐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지역 공무원 764명이 성범죄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 다나다

하지만, 징계자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을 받은 공무원은 567명으로 전체의 74.2%를 차 지했다.

10명 중 7명 이상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지방공무원 성범죄·음주운전 징계현 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광 주는 147명, 전남은 617명이 징계를 받았다. 전 국적으로는 성관련 범죄 206명, 음주운전 5271 명에 당했다.

광주는 성폭력·성추행으로 2명이 견책을 받았다. 음주운전은 1회 135명(정직 7명·감봉 7명·견책 121명), 2회 6명(정직 5명·감봉 1명), 이른바 3진 아웃인 3회는 3명(정직 3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성폭행 범죄로 공무원 1명이 파면됐으며 1명이 강등됐다.

성추행은 6명(감봉 4명·견책 2명), 성매수 비위로 9명(감봉 1명·견책 8명)이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는 모두 600명으로 1회적발된 공무원은 552명이며 이 가운데 428명이 견책처분을 받았다. 2회가 37명으로 24명이 정직을 7명이 감봉됐다. 3회 적발된 10명은 6명은 강등, 2명은 감봉, 강등과 견책은 각 1명이다.

성범죄와 음주운전 징계가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견책 등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도지사 공약 투명하게 평가 전남도, '주민 평가단' 출범

전남도는 도지사 공약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할 '공약이행 주민평가단'이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약 평가단은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등 5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민선 6기 종료에 맞춰 2018년 6월 말까지다.

평가단은 매년 공약 사업별 진척, 사업비 확보, 집행 비율 등 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민선 6기 이낙연 지사의 공약내용은 모두 76

건이다.
전남도는 평가단이 선별한 공약을 토대로 실천 계획 실효성, 실행 가능성, 타당성 등을 점검해 10월 초 이행할 공약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은수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평가단 수행과 관련한 조례를 조만간 제정할 계획"이라며 "명실공히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도정 평가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3월 엥이다 고 필쳤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홍성담 걸개그림 '세월오월' 美 유엔본부 시위 등장할 듯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해 논란이 됐던 홍성담 작가의 작품 '세월오월'이 미국 뉴욕 유엔본 부앞에서 열리는 시위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홍 작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미주 한인사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평화 시위에 사용하기 위해 세월오월 전시를 요청해, 그림 파일을 주최 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한인들은 박 대통령의 유엔본부 방문에 맞춰 홍 작가의 작품을 들고

'세월오월'은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에 전시하기 위해 지역 작가들과 함께 기획한 것으로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당시 시민군과 대인시장에서 주먹밥을 나눠주던 오월 어머니가 힘차게 세월호를 들어 올리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시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홍 작가가 박근혜 대통령을 김기춘 비서 실장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조종'을 받는 허수아비 로 묘사해 논란이 일어,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가 사퇴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한편 홍 작가는 오는 18~29일 대만 청콩대학에서 홍성담의 민중미술세계 '동아시아 민중문화:희망의 연대'를 주제로 '세월오월'을 비롯해 5월 판화연작 등 50여점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갖는다. 개막식에는 서승 리츠메이칸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5주년 리셉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5주년 경축 리셉션이 12일 오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이형규 전북 정무부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왕시엔민(王憲民) 중국 주광주총영사, 윤장현 광주시장, 조영표 광주시의장(사진 왼쪽부터)이 중국 건국 65주년을 기념하는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전남도 제공〉

도시철도2호선 토론회

광주시의회 의정혁신연구회

광주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의정혁신연구회 (대표 의원 김보현)'가 15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 서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 련 쟁점 토론회'를 주제로 제1차 연구모임을 갖는

'의정혁신연구회'는 광주시의원 모두가 참여해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의정 역량 강화 도모, 시정현안 연구 등 을 통해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7대 의회 개원과 함께 김보현 의원의 주도로 시작됐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농촌 활성화 선도지구 광양 옥곡·강진 성전 선정

문화힐링센터·복지문화관 등 건립 국비 112억 확보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중 하나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공모에서 광양시와 강진군 등 2곳이 선정돼 총사업비 160억원 중 국비 112억원을 확보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 구 사업은 전국 15개 지구에 총 사업비 1200억원이 투입되는 시범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0개 시·도, 24개 지구에 대해 대면·현장평가를 거쳐 9개 시·도 15개 지구를 최종 선정했다.

와당 안정됐다. - 내년부터 시행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은 지금까지의 도로 및 시가지 정비 등 하드웨 어 중심으로 추진되는 방식의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에서, 지구별 고유의 주제를 살려 생활공동체, 농촌 관광 메카, 문화·복지 중심지, 교육·역사 중심지, 사회·복지서비스 거점 등 여러 가지 사업 유형으로 추진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광양 옥곡면의 경우 옥곡면사무소 주변에 다목적 문화 복합공간인 문화힐링센터와 로컬푸드센터, 에코힐링쉼터, 특화거리 등이 들어서는 중심상권 활성화지구 유형으로 조성된다.

불성와시구 규정으도 조정된다. - 강진 성전면은 복지문화관 등 시설물 리모델링 과 소공원, 산책로, 운동시설 및 특산물 판매장 등이 들어서는 농촌 리모델링지구 유형으로 조성된

선도지구로 선정된 마을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선진사례 학습 및 주민 포럼을 통해 주민 참여형 사 업 방향을 설정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본계 획을 수립한 후, 농식품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 을 시작하게 된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59개 읍면을 선정해 읍면당 70억~100억원씩 모두 9568억원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16개 읍·면을 완료했고, 43개 읍·면은 추진 중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